

“5·18 기념행사 10일 이내로 집중을”

5·18재단 30주년 앞두고 ‘기념사업의 실태·과제’ 토론회

당사자·시민·시민단체·정부 합심 새 참여동기 만들어야

5·18 30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과 행사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한 달여간 지속되는 행사를 10일 이내로 단기화·집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5·18을 전국화 하려면 사설상 광주가 독점하고 있는 행사 예산을 분산시키고 예산 마련도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민적 모금 방식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2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린 ‘5·18 기념사업의 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나간체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

벌·명예회복·보상 등 ‘5·18 민중항쟁’에 대한 과거청산이 어느 정도 이뤄진다. 1997년부터 정부가 5·18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재정지원을 해주면서 시민 참여가 급격히 줄었다”며 “당사자와 시민, 시민단체, 지방 정부의 조화와 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참여동기를 만들어 내야할 때”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기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억울한 누명을 뒤어 쏟은 집권세력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었는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에 과거와 같은 기념사업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나 교수는 특히 “5월 한 달간 5·18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전국화를 외치면서 광주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은 단 4%에 그쳤다”면서 “행사기간을 10일 이내로 줄이고 다른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는 한편 예산도 정부 지원방식이 아닌 국민적 모금 방식으로 바꿔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또 “국립 5·18 민주묘지를 비롯한 5·18 기념문화관, 5·18 기념공원 등 다양한 기념사업이 시민단체와 지방정부, 정부 등에 의해 추진·조성됐다”면서 “민주인사와 학생운동가들의 수난사가 고스란히 담긴

505 보안부대와 국군 광주병원, 광주 교도소 등은 5·18 사적지로 지정돼 있음에도 현재까지 방치돼 있다. 가능한 원형을 보존하는 관점에서 적절한 기념시설로 재창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로 나선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5·18 기념사업과 유사한 국제적 사례나 4·19, 부마항쟁, 6월 항쟁 기념사업 등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 기념재단은 지난 6월부터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세 차례에 걸쳐 서구 치평동 5·18 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진실 규명·책임자 처벌·명예회복·피해자 보상·기념사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5·18 민중항쟁 30주년 준비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형호기자 khh@

마사회·광주김치문화축제 추진위 “김치사랑”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광장에서 한국마사회와 광주김치문화축제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KRA Angels와 함께하는 김치사랑 나눔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박광태 광주광역시 장과 김성훈 광주김치문화축제 추진위원장, 김광원

한국마사회장, 베이징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최민호씨 등 모두 4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담근 1만포기(2만kg)의 김장을 김치는 어린이재단 결연대상자와 마사회 자매결연시설, 광주지역의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광주시 제공)

순천만·영암습지 ‘내셔널트러스트상’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지로 자리 잡은 순천만과 영암습지 등이 내셔널 트러스트 보전대상지로 선정됐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2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유한킴벌리가 공

동 주최한 ‘2009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에서 순천시가 응모한 순천만이 ‘잘가꾼 자연·문화유산’ 부문에 선정돼 지난 19일 ‘2009 한국내셔널트러스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영산

강살리기운동본부가 응모한 영암군 영암습지는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 유산 부문’에 선정,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시민공모전은 환경 전문가와 시민

이 평가단으로 참여,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문화 유산 등을 선정·시상하는 행사다./김형호기자 khh@

전남대 파격 장학제도

인재육성 기금 조성도

우수학생 유치 중장기 종합대책

전남대가 ‘4년치 등록금 면제’ 등 과격적인 장학제도와 인재육성 기금 조성 등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22일 전남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2010학년도부터 인문계열과 이공계열 신입생 중 성적우수(수능 성적 평균 2등급) 장학생을 각각 40명 이상 선발, 대학 생활 4년간 등록금과 생활관비를 모두 면제해줄 예정이다.

이공계열은 수능 성적 평균 3등급 이상이면 등록금 5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부 졸업생 중 전남대 대학원이나 세계 100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도 1년치 등록금을 지원한다.

전남대는 또 ‘글로벌 스타인재’ 육성 재원 마련을 위한 대학적인 기부

운동을 추진, 2012년까지 총 6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대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 전략으로 ‘가고 싶은 대학’ 이미지 만들기 위해 교수들의 모교 방문 진로특강, 거점 국립대학 공동입학설명회 등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김권섭 입학관리본부장은 “수도권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지방 우수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갈수록 지역 거점대학들의 우수학생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은 전남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다양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람이 길이요, 사람이 힘입니다!

창조의 에너지로 통합과 혁신의 르네상스를...

전 천왕대 인사수석 정찬용의 실과 꿈

정찬용의 도전



전남대·생활관 운영업체 ‘수익금 갈등’

‘임대료 등 의도적 축소’

‘자판기 운영권 등 횡포’

전남대가 수익금 배분을 놓고 생활관(기숙사) 운영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전남대와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전남대는 민간투자시설사업(BTL) 방식으로 건립한 생활관 운영

업체인 U사와 식당 등 부속시설 운영 수익금 배분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전남대는 지난 2005년 U사와 식당과 편의점, 당구장 등 20여개 점포 임대료 등의 이익금 등이 4억여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협약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임대료 수입 규모를 놓고 전남대와 운영업체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견해 차를 좁힐지 못하고 있다.

전남대는 생활관 입주 학생이 정원을 모두 채운 데다 식당과 편의점 등 임대료 수익금이 외부 회계법인 분석

결과 기초금액인 4억원을 훨씬 넘은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대는 “운영업체가 초과이익금 분배를 피하기 위해 점포 임대료 등 이익금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협약을 위배했다”며 “초과 이익금을 회수하면 학생들의 생활관 사용료를 연 20만원 이상 낮출 수 있다”면서 업체 측에 줄 BTL 임대에 따른 3분기 정부 지원금(1억5천여만원)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26개 상가중 5곳 정도만 흑자를 내는 등 임대 수입이 많지 않고 협약 내용에 따른 수익금은 6억여원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전남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판기나 ‘동전 빨래방’ 운영권을 가져가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체측은 우선 전남대가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며, 대학측도 소송을 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세여서 양측의 갈등은 법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